

##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의 배경

/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 여론조사, 203 대 164로 클린턴 우세. 유가브YouGov Election Model의 예측, 317 대 221로 클린턴 당선. 파이브써티에이트FiveThirtyEight의 예측, 클린턴 당선 가능성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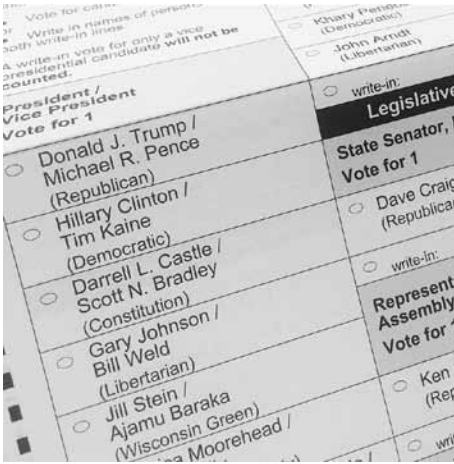
하지만 모두 틀렸다.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대학)의 혁신적인 여론조사법을 적용한 『엘에이 타임스LA Times』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을 내건 트럼프가 306대 232로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선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함께 진행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함에 따라, 8년 만에 정권을 공화당에 완전히 넘겨주게 되었다.

어떻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소속 정당에서까지 배척받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대선 과정의 특징과 선거 결과,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을 살펴본다.

## 1. 미국 대선의 특징 -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이번 미국의 대선 투표율은 발표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58.4%로 추정되고 있다(<http://www.electproject.org/>). 미 대선에서 주민이 투표하는 것을 popular vote(직역하면 ‘인민의 투표’)라고 부르는데, 위의 투표율은 이 투표와 관계된 것이다. 오바마가 처음 당선되던 2008년의 62.2%보다는 크게 낮고, 오바마가 재선되던 2012년의 58.6%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유권자의 58.4%가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클린턴은 47.68% 대 46.79%로 승리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대통령과 상원 및 하원 의원 같은 연방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Election Day’는 ‘11월 첫 번째 일요일 다음의 화요일’이며, 올해는 11월 8일이었다.)

클린턴이 미국 국민의 표를 더 많이 받고도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미국 대선 제도가 일종의 ‘간선제’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투표하는 투표용지에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그리고 소속 정당이 적혀 있다. 따라서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주민이 직접 대선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주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용지에는 대통령/부통령과 소속 정당이 표시되어 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ial\\_election,\\_2016](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ial_election,_2016))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국민은 클린턴이나 트럼프 등의 후보에게 ‘직접’ 표를 준 것이 아니고, 클린턴에 투표하기로 약속한 자기 주state의 민주당 선거인단이나 트럼프에 투표하기로 약속한 자기 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에 표를 준 것이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해당 주도州都에 모여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하는데, 여기서 선거인단의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부통령으로 선출된다. 이 투표를 ‘electoral vote’(직역하면 ‘선거인단의 투표’)라고 부르며,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다. 올해는 12월 19일이다.\*

그런데 왜 인민이 직접 투표한 득표율과 선거인단 확보 수치에 불일치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선거인단 배정이 popular vote의 득표율을 따르지 않고 그 주에서 popular vote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 즉 “winner-

\* 만약에 538명인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대통령 선출은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주마다 한 표씩 행사하여 선출한다. 마찬가지로의 경우, 부통령의 선출은 상원으로 넘어가 100명의 상원 의원 모두가 투표한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2조.

takes-all” 시스템으로 선거인단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306 대 232로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것은 주에서 독식한 공화당 측 선거인단 수를 전부 더한 것이 306이고 마찬가지로 독식한 민주당 측 선거인단 수를 전부 더한 것이 232가 되었다는 뜻이다.\*

선거인단 제도를 좀 더 알아보면,  $306 + 232 = 538$ , 이것이 선거인단의 총 숫자다. 선거인단 538명이 주 별로 배정되는 원리는 상원/하원 의원 선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숫자는 주마다 2명, 모두 100명이다. 이와 똑같이 모든 주에 2명씩의 선거인단이 배정된다. 하원 의원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 435명인데, 이와 똑같은 수가 각 주에 배정된다. 결국 미국 50개 주에는 그 주의 ‘상원 의원 수 + 하원 의원 수’ 만큼의 선거인단이 있게 된다. 거기다가 연방의 수도 워싱턴에는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총 538명이 된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에 선거인단도 많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인데, 이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55명이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클린턴이 61.8%, 트럼프가 32.8% 득표하여 55명의 선거인단을 클린턴이 독식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88년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승리한 후, 1992년 빌 클린턴 때부터 24년간 항상 민주당이 승리하였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

---

\* 메인과 네브래스카 두 주는 ‘승자 독식’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배정하지 않는다. 이들 두 주는 ‘국회의원 선거구 방법 congressional district method’ 을 사용하는데, 각 선거구에서 1등을 한 정당에게 선거구별로 선거인단 1석씩을 배정하고, 주 전체 득표에서 1등을 한 정당에게 선거인단 2석을 배정한다. 선거구별 분할과 ‘승자 독식’ 을 혼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메인 주는 1선거구에서 민주당, 2선거구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였고, 주 전체 득표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여, 민주당이 3석, 공화당이 1석을 차지하였다. 네브래스카에서는 1, 2, 3구 모두 공화당이 승리하였고, 그래서 3+2, 즉 5석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였다.

은 주는 텍사스이며, 이번에 텍사스 주에서 트럼프가 52.4% 득표율로 승리하여 38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지고 갔다. (텍사스에서는 1976년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승리한 후,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때부터 36년간 항상 공화당이 승리하였다.) 그리고 뉴욕 주와 플로리다 주에 각각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세 번째로 많다.

이런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특정 주에 2등, 3등, 4등을 한 정당/후보는 단 한 석의 선거인단도 획득할 수 없으므로 그 정당/후보에게 투표한 주민의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소수 정당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이번에 popular vote에서 3등(3.28%)을 한 자유당의 개리 존슨Gary Johnson, 4등(1.02%)을 한 녹색당의 질 스타인은 단 한 석의 선거인단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독특한 선거제도 배후에는 미연방이란 국명 그대로 United Sates, 즉 ‘주들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국회의원 제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상원 의원이 주마다 2명씩이라는 점에는 인구가 많은 주건 적은 주건, 산업이 발전했건 못했건, 그 어떤 주의 권리도 같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에 반해 하원 의원을 인구 비례로 나누는 것은 인민 대표성을 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국회의원 제도는 ‘주 대표성’과 ‘인민 대표성’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선의 원리도 이와 같다. 일반 국민의 투표, 즉 popular vote에서 직접 인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으로는 특정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해서 ‘주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대칭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독특하게 인민 대표성과 주 대표성을 결합한 이 제도는 말하자면 ‘우리 주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방식으로 주의 권한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인단 제도 및 승자 독식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은 뜨겁다. 먼저 찬성론을 살펴보자. 첫째, 인구가 집중된 도시 지역이 일방적으로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인구가 희박한 농촌 지역도 홀대받지 않게 된다. 일반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다면 후보들은 농촌 지역 유세는 가지도 않으려 할 것이다. 둘째, ‘주의 연합’이 연방이라는 연방의 근본적 성격을 지킬 수 있다. 셋째, 승자 독식 제도에서는 소수집단이라도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칠 수 있다. 득표율로만 환산한다면 소수집단의 영향력은 거의 없게 된다. 넷째, 양당 제도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반론은 훨씬 거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처럼 일반 국민의 투표(popular vote)와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vote)가 어긋나는 경우다. 이런 일은 1876년, 1888년, 200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였다. 연방정부의 통합력이 약하던 시절에는 자기 주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를 정한다는 관점에서 ‘선거인단-승자 독식 제도’가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하나의 강력한 국가이고 주는 그 국가의 큰 지역에 불과하게 된 지금은 더 많은 미국 국민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패배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합리하게 보인다. 둘째, 후보들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주를 무시하고 경합주에 주력을 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다시 말해 유권자가 더 홀대받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미 언급된 사표의 문

제, 소수 정당 차별의 문제, 인구가 많은 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사모아, 괌 등 ‘準 주territories’ 주민에게는 투표권이 없는 문제 등이 있다.

## 2. 선거인단 투표 - ‘선거인단 반란’의 가능성

이미 보았듯이 공식적으로는 12월 19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야 대통령/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11월 8일 일반 국민의 투표로 선거인단이 선출될 때, 그들은 특정 후보를 투표하겠다고 서약하고 선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은 11월 8일 선거인단 선출이 끝나면 선거인단을 지지 후보 별로 나눠서 환산하고 대통령/부통령이 확정된 것으로 발표한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선거인단은 꼭 서약한 대로 투표해야 하는가? 11월 8일에는 트럼프 지지를 서약하고 선출되었지만, 생각이 바뀌어 12월 19일에는 클린턴에게 표를 던지면 안 되는가? 이렇게 서약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서약한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는 선거인을 “배신한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라고 부르는데, 미 대선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총 157명이 있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전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11월 8일에 발표한 대통령/부통령 당선자는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

\* 물론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한 선거인pledged elector이 아닌 선거인

그러나 이러한 “선거인단의 반란”은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미국의 29개 주와 워싱턴 D. C.에서는 이 배신이 불법이다. 물론 형량은 보통 벌금형 혹은 경범죄로 경미하고 이에 대해 법률적 처분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말이다. 미시간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배신 투표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효표로 처리된다. 하지만 불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신이 가져올 정치적, 생활상의 변화다. 일단 선거인단을 뽑아 준 당에서 축출되고 당과 당원들의 격렬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생활상의 보복을 듣자면, 그 지역에 발붙이고 살기 힘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인단들은 다 열성적인 당원들이기 때문에 배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2004년에 미네소타의 한 선거인은 민주당의 존 케리에게 투표하기로 했다가, 실제로 투표할 때는 당의 후보 지명전에서 이미 패배한 존 에드워즈를 찍은 적이 있다. 이것은 실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지 정당을 바꾼 배신 투표는 1972년에 있었는데, 공화당 선거인 중 한 명이 자유당 후보에 투표를 하였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그 157명의 배신 투표로 인해 당선자가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http://change.org)에서는 “12월 19일에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뽑자”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

unpledged elector, 즉 특정 후보 지지를 서약하지 않고 당선된 선거인도 극소수 존재하며, 이런 경우는 “배신한 선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157명 가운데 71명은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일 전에 사망한 경우고 3명은 기권한 경우이며, 적극적으로 후보를 바꾼 경우는 82건이다.



## Electoral College: Make Hillary Clinton President on December 19

 Daniel Brezenoff NC



### Sign this petition

4,650,182 supporters

1,349,818 needed to reach 6,000,000

Last name

First name

Email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약속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에게 선거인단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자고 호소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출처: <https://chang.org>의 청원 페이지)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한 선거인단의 ‘반란 투표’를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11월 23일 현재 서명자가 458만 명을 돌파하였다.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에서 살기 싫은 사람들의 마지막 안간힘으로 볼 수 있는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청원자들은 각 주의 선거인단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고 보통 1,000달러 정도 되는 배신 투표의 벌금을 대신 내 주기 위한 모금 운동을 독려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다. 워낙 표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힐러리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역전을 하려면 무려 38표의 ‘반란’이 필요하다. 당과 당원으로부터의 비난과 보복, 혹은 벌금형 위반보다 더 심각한, 아니 비난과 보복, 벌금형이 거론되지 못할 정도의 엄청 심각한 스캔들이 터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투표하는데, 1836년 선거에

서 버지니아 주의 선거인단 23명 전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리차드 존슨에게 투표하지 않고 기권해 버렸다. 그 이유는 존슨이 자신의 흑인계 노예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백인 상류층 남성들에게 흔한 일이었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때로서는 매우 심각한 스캔들인 이 사건으로 인해 존슨의 선거인단 득표는 23표가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과반수에서 한 석이 모자라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2조에 따라 부통령 선거가 미국 상원으로 넘어가 버렸다. 당시 민주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기에 결국 존슨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이처럼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21세기 기준에서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엄청난야 할 것인가? 트럼프가 어느 정도로 '부적절'해야 충실한 공화당 선거인단 38명 이상이 배신한단 말인가?

### 3. 투표 결과 분석 - 민심의 향배

이제 이번 대선 투표에 나타난 민심의 향배를 알아보자. ABC, AP, CBS, CNN, FOX, NBC가 공동으로 24,537명을 상대로 벌인 출구조사 및 전화조사의 결과를 이용하기로 하겠다.

첫째, 정치 성향. 자신을 '진보Liberal'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4%가

클린턴에게 투표했다. 자신을 ‘보수Conservative’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1%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전혀 놀랍지 않은 결과다. 그리고 ‘중도 Moderate’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클린턴에게 52%, 트럼프에게 41%의 표를 던졌다. 그런데 왜 클린턴이 득표율에서 간신히 이겼는지 궁금할 것이다. 자신을 ‘보수’라고 보는 사람이 ‘진보’라고 보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즉 응답자의 26%가 자신을 ‘진보’라고 했고, 35%가 ‘보수’라고 답한 것이다. 또한 ‘중도’ 진영에서 4년 전에 오바마는 56 대 41로 승리했지만 클린턴은 52 대 41로 이겼다. 민주당은 4년 전의 중도와 지지자들 중의 일부를 자유당과 녹색당 후보에게 빼앗겼다는 얘기가 된다.

둘째, 당원 여부. 민주당원도 공화당원도 아닌 사람은 클린턴 42 대 트럼프 48. 트럼프 승리.

셋째, 성별. 의외로 클린턴에 대한 여성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 남성은 41 대 53으로 트럼프가 우세한 반면, 여성은 54 대 42로 클린턴이 우세. 하지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 이른바 “유리 천장glass ceiling”을 깨달라는 호소에 파괴적 설득력은 없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오바마가 여성에게서 55 대 44로 승리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인종. 흑인은 88 대 8로 클린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아시아계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계Hispanic는 65 대 29로 클린턴에게 지지를 보냈지만 흑인만큼은 결집도가 강하지 않았다. 이 세

인종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인데 4년 전 오바마 때와 비교해 볼 때 지지세가 약해졌다. 오바마의 경우는 흑인 93%, 아시아계 73%, 히스패닉 71%의 지지를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인구의 절대 다수(63.7%)는 여전히 '비히스패닉 백인'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서 트럼프는 58 대 37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39대 59로 패배했던 오바마는 흑인이었으므로 백인의 지지가 옳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클린턴은 백인인데도 백인 남성한테 31 대 63으로 졌을 뿐만이 아니라, 백인 여성에게도 43 대 53으로 패했다. 동일한 백인-백인 대결이었던 빌 클린턴의 1992년과 1996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백인으로부터 39 대 40, 43 대 46로 근소하게 졌을 뿐이다.

다섯째, 종교. 복음주의 성향이 강한 프로테스탄트(신교)나 보수적인 몰몬교도에게서 트럼프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가톨릭(구교)에게서도 트럼프가 52 대 45로 이겼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을 믿는 히스패닉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일랜드, 동유럽 출신의 가톨릭계의 지지를 받아 왔다. 게다가 클린턴의 남편인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아일랜드계이고, 부통령 후보 팀 케인도 가톨릭 신자였는데도 말이다. 4년 전 오바마는 가톨릭계에서 50 대 48로 이겼다. 이것은 여러 성 소수자LGBT나 이슬람에 대한 정책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온 민주당에 대한 가톨릭계 대중의 반감을 조장하는 데에 트럼프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종합해 보면, 민주당은 백인(특히 남성)과 중도파, 비당원 부동층

의 지지를 끌어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계 지지도는 역전 당하였다. 게다가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의 지지도는 이전보다 약해졌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던 것이다.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으로 구별되는 표심은 더 자명하다. 미국은 교육비, 특히 대학 교육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학력과 소득은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 먼저 학력별 통계를 보자.

2016년	클린턴	트럼프
고졸 이하	45	51
대학 재학	43	52
대졸	49	45
대학원 입학 이상	58	37

저학력자일수록 트럼프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년 전은 달랐다.

2012년	오바마	롬니
고졸 미만	64	35
고졸	51	48
대학 재학	49	48
대졸	47	51
대학원 입학 이상	55	42

분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오바마는 저학력자 모 든 구간에서 승리했다.

교육수준을 인종별로 다시 나누면 2016 대선에서 클린턴의 패배

이유가 분명해진다.

		클린턴	트럼프
백인	대졸	45	49
	대졸 미만	28	67
유색인	대졸	71	23
	대졸 미만	75	20

유색인은 저학력자의 경우에도 클린턴 지지가 높았다. 이것은 학력 차이가 투표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 인종별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의 유색인종에 대한 공격이 그들을 인종적으로 단결하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백인의 경우는 다르다. 대졸자의 경우 클린턴은 근소하게 패배했는데, 저학력자에게는 28 대 67, 그야말로 ‘대패’ 하였다. 저학력 백인에게서의 대패, 이것이 클린턴의 결정적 패인이다.

현대사회에서 저학력은 저소득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그렇다. 연간 가구당 소득수준별 득표율을 살펴보자.

2016년(단위: 달러)	클린턴	트럼프
3만 미만	53	41
3만~5만	51	42
5만~10만	46	50
10만~20만	47	48
20만~25만	48	49
25만 초과	46	48

고소득자의 대다수가 백인일 것이므로 트럼프 지지가 근소하게 높은 것은 당연하다. 잘 보면 고소득자의 통계는 위의 학력 통계의 ‘백인 대졸’의 통계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백인 대졸’의 수가 응답자의 37%였고 10만달러 이상 소득자가 응답자의 34%였으니, 이 둘은 상당히 겹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연소득 5만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다. 여기에는 백인도 있고 유색인도 있는데, 백인은 ‘대졸 미만’이 대부분일 것이다. 백인 ‘대졸 미만’에서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클린턴이 근소하게 승리하였다. 이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4년 전과 비교해야 한다.

2012년(단위: 달러)	오바마	롬니
3만 미만	63	35
3만~5만	57	42
5만~10만	46	52
10만~20만	44	54
20만~25만	47	52
25만 초과	42	55

가족 연소득 3만달러 미만 구간에서 오바마는 63%의 지지를 받았는데 클린턴은 53%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 3만~5만달러 미만 구간에서도 클린턴은 오바마보다 6%를 적게 받았다. 즉 저소득층 구간에서 2016년 클린턴의 근소한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2012년과 비교할 때 ‘대패’인 것이다.

인종, 성별, 학력, 소득 통계를 결합시키면 민주당은 ‘백인 + 남성







이트의 포드Ford 등으로 한때는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던 지역이다. 당시에는 ‘제조업 벨트Manufacturing Belt’, ‘공장 벨트Factory Belt’, ‘강철 벨트Steel Belt’ 등으로 불리었지만, 이젠 그 제조업이 다 망하고 기계와 공장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러스트 벨트Rust Belt’라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최근 몇 십년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자유무역 협정, 세계화의 진행, 미국 밖으로의 아웃소싱(생산기지 이전), 자동화 발전 등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미국의 ‘굴뚝산업’ 지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미국 제조업의 탈산업화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 지위가 크게 하락한 백인 노동자들의 민주당 이반, 이것이 이번 트럼프 당선 of 본질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미 인구 통계국 산하 스테이너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10월 5일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국 고졸 노동자는 1996년에서 2014년 사이에 1인당 소득이 8.9% 떨어진 반면 대졸 노동자는 같은 기간 1인당 소득이 22.5%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의 심화는 이 기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1978년과 1996년 사이를 비교해도 고졸 백인 남성의 소득은 10.7% 줄고 대졸 백인 남성의 소득은 30.4% 늘었다.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신자유주의 시대 내내 누적적으로 계속되어 온 경향이었던 것이다.

실업과 빈곤의 증가, 실질임금과 복지 혜택의 감소에 신음하던

---

\* 개인 소득 추적 방식을 이용해, 1996년 25~44세 남성과 18년 후인 2014년 43~62세 남성의 소득을 비교했다.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은 2008년 오바마가 등장할 때 큰 기대를 품고 민주당에 표를 몰아 주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그들에게 돌아온 건 환멸뿐이었다. 그에 반해 미국 동부의 월 스트리트 세력, 즉 금융 자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세금을 퍼부은 ‘구제금융’ 덕에 큰돈을 챙긴 데다가, 미국에서 빠져나간 제조업을 개도국이 운영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정반대쪽 서부의 실리콘 벨리, 즉 IT업계도 지난 8년 동안 고공 성장해 왔다.

이렇게 세계화와 탈제조업화, 금융화로 이익을 본 동부와 서부에서는 클린턴이 승리했다. 하지만 세계화와 탈제조업화의 피해자인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믿지 않았다. 트럼프는 직접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을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 같은 불공정한 무역협정 때문에 직업을 잃은 노동자와 황폐화된 지역을 직접 목격”하고는 “열심히 일했음에도 목소리를 잃은 이들에게 힘이 되겠다”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무효화하겠다고 포효하였다. 반면 힐러리는 수십 년간 항상 민주당이 승리해 온 이곳의 낙승을 예상하고 제대로 유세조차 하지 않았다. 이곳은 AFL-CIO라는 거대 노조연합이 버티고 있는 곳인데, AFL-CIO는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 줄곧 민주당의 파트너였다. 이번에도 AFL-CIO 지도부가 노조원들에게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지침을 따르지 않고 상당수가 트럼프에게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러스트 벨트에는 이번에 공화당으로 넘어간 5개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쪽부터 보자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 위스콘신, 일리노이, 아이오와에 이르는데, 여기서 클린턴은 일리노이 빼고 다 패배했다. (웨스트버지니아와 인디애나에서는 오바마와 클린턴 모두 패배했다.) 그런데 대선 전 민주당 예비 선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웨스트버지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인디애나 등은 모두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승리한 주이고, 일리노이와 아이오와는 아주 근소하게 클린턴이 승리했던 주다. 한마디로, 샌더스가 강했던 곳에서 클린턴은 다 졌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와 제조업 몰락으로 계속 빈곤해지고 있는 백인 노동자들이 월 스트리트와 실리콘 밸리를 대변하는 클린턴 세력에 등을 돌리고 이른바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샌더스 쪽으로 쏠렸는데, 샌더스가 후보 지명에서 탈락하자 샌더스가 클린턴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지지자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않거나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2012년과 2016년의 일반 국민의 투표 득표수를 비교하면 민주당 표는 200만 표 이상 빠진 반면, 공화당은 100만 표 이상을 더 가져갔다. 단순화시켜서 볼 때, 2012년 민주당 지지자 200만 중의 절반이 기권하고 절반이 트럼프에 투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주당	공화당
2012년	65,915,795	60,933,504
2016년	63,752,692	62,026,668
차이	- 2,163,103	+ 1,093,164

결국 버니 샌더스 열풍으로 표현된 불평등한 체제와 기성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트럼프는 부추기고 이용한 셈이다. 이것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선진국들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좌우 기성 정치인 일체를 금융자본 체제의 대변자로 배격하고 되고, 포퓰리즘 세력이 대두되면서 ‘기성 정치 대 포퓰리즘’의 대결 구도가 자리를 잡게 된다. 대중은 포퓰리즘으로 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브렉시트Brexii’,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였다. 그나마 좌파 세력이 민중의 요구를 받아 운동의 구심을 잡아가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포데모스 같은 신진 포퓰리즘 세력이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영국, 프랑스처럼 구태의연한 극우파 선동 정치인들이 대두되는 시대의 역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판 브렉시트’다. 트럼프의 음담패설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졌지만 이런 ‘정치적 정도political correctness(PC)’, 곧 다양한 소수자/약자를 존중해 차별적 대우를 피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는 선거판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PC의 지지자들은 애초에 트럼프와는 상극이며 클린턴의 부동표거나 자유당/녹색당의 지지자다. 그에 반해 ‘리스트 벨트’의 몰락한 백인 노동자들 다수는 삶의 고단함에 짓눌려 PC 논란 자체를 사치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경제와 삶은 시궁창인데 정부는 시리아에서 전쟁이나 하고 세금은 낭비되고 군수기업은 돈을 번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민주당은 부르짖지만, 클린턴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갓다 바친 월 스트리트와 실리콘 밸리가 얻는 엄청난 수익은 그들의 어깨 위에 낙수(trickle down)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자유무역협정, 금융 규제 완화, 고용 유연화, 임금 삭감 등을 추진한 신자유주의의 침병임을 대중은 정확히 보았다.

그 점에서는 공화당도 똑같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혀 공화당스럽지 않았다. 심지어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은 그를 지지하기는커녕 낙마시키려고까지 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앵무새처럼 읊어 온 ‘사회복지의 축소’니 ‘연금 개혁’이니 ‘실업급여 삭감’이니 혼계하지 않았다. 종교와 도덕적 설교도 늘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고 수입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며 불법 이민자는 쫓아내겠다고 하면서 백인 저소득 노동자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 이것이 뉴욕시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부동산 재벌, 재산이 45억달러(약 5조 원)가 넘어 『포브스Forbes』 선정 세계 324위 부자, 미국 113위 부자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사연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공화당의 승리가 아니다. 미국 기성 정치의 패배일 뿐이다.

미시간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러스트 벨트의 대변인이라 불리는 에미넴Eminem의 자전적 영화 《8 mile》을 보면, 한 래퍼가 다음과 같이 래핑한다.

“빌어먹을 철강 회사, 진절머리 나.

점심시간 겨우 30분 주고, 몇 폰 벌려고, 온 몸은 쭈시고.

이런 X 같은 걸, 이런 X 같은 런치트럭에서 먹는 것 지켜워.

X 같은 음식이야. X 같은 기분이야.

아프다고 결근할 걸.“

이게 바로 이번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조교】**